

2017

정부 및 수도권 지자체 규제완화 정책
동향보고

2017. 04. part2 제 72 호

지역균형발전협의회 자문단  전북연구원

Contents

I . 정부 추진동향

1. 문재인 ‘반대’ 안철수 ‘찬성’ ... 규제프리존 법안 운명은 3
2. 새 정부 최우선 추진 정책은 ' 규제 완화 ' 4
3. 규제프리존과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이란성 쌍둥이? 5
4. 대선주자들 "4 차 산업혁명 시대 , 신산업 규제 철폐 " 한목소리 6

II . 수도권 추진동향

1. 인천 강화 · 옹진군 등 휴전선 접경지역 자자체
" 수도권 규제 완화 해달라 " 잇단 요구 7
2. 홍준표 " 집권하면 수도권 규제 대폭 완화 " 8

III . 비수도권 (지역) 추진동향

1. 2007 년 이후 신설 공공기관 혁신도시로 9
2. 혁신도시에 대한 대선 후보들의 정책 10
3. 수도권규제 완화 정책 반대를 11

1. 문재인 ‘반대’ 안철수 ‘찬성’ ... 규제프리존 법안 운명은

01

개요

보도형식	언론	보도일자	2017.04.18
보도대상	전국	보도매체	국민일보

02

주요내용

▶ 박근혜정부의 대표 규제완화책인 ‘규제프리존 특별법’ 이 유력 대선 후보들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어서 대선 쟁점으로 부상

- 문제는 정부는 여전히 규제프리존법 통과와 시행을 전제로 정책을 입안하고 있어 향후 정책적 혼선이 우려
- 17 일 국민일보가 입수한 산업통상자원부의 ‘4 차 산업혁명에 따른 주요 영향과 대응방향’ 이라는 제목의 내부 문건
 - 정부는 규제로 인해 4 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육성해야 할 신산업 촉진에 어려움이 많다고 진단
 - 이에 업종 · 입지 · 융복합 등 규제를 한정된 지역에서 과감히 철폐하는 규제프리존 시행이 필요하다고 강조
- 규제프리존은 박근혜정부가 2015 년 12 월 발표한 규제완화 정책
 - 수도권을 제외한 14 개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2 가지 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특별법으로 해당 지역에 규제를 대폭 풀어주자는 내용
 - 20 대 총선을 앞둔 지난해 3 월 당시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 등 13 명이 ‘지역전략산업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을 발의했다가 자동 폐기
 - 같은 해 5 월 20 대 국회 개원과 함께 이학재 의원 등 새누리당 122 명과 국민의당 의원 3 명 등 125 명이 재발의해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 중
 - 그러나 지난 2 월 기재위 경제재정소위원회는 계류 법안에 대한 국회통과 여부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규제프리존법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못했고 지난달엔 안건에 올리지 않기로 함
- 결국 규제프리존법의 존폐는 차기 정권을 누가 잡느냐에 달려짐
- “4 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해 규제프리존법이 통과돼야 한다” 며 찬성 입장
- 박근혜정권을 계승하는 것” 이라며 비판, 네거티브 규제로 신산업 분야를 육성할 수 있다는 말로 규제프리존의 무용론까지 언급
- 현재 민주당과 정의당은 법안에 반대하고,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자유한국당은 찬성 입장
- 정부가 4 차 산업혁명 대응을 앞세워 규제프리존법이 통과돼야 한다는 프레임을 바꾸지 않고 있다는 것
 - 산업부의 내부 문건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이후 작성된 것임에도 규제프리존 법안이 국회 통과를 가정해 작성 규제프리존, 국가전략프로젝트 등과 연계해 기술개발뿐만 아니라 규제 · 제도 정비, 새로운 비즈니스모델 구현 등 테스트베드를 구축하겠다는 계획까지 세움
 - 여기에 규제프리존에 해당하는 14 개 시 · 도, 27 개 전략산업 대상 시행을 통해 지역 단위의 규제개선 효과를 전국 단위로 확산하겠다는 계획도 포함
 - 기획재정부도 규제프리존 법안 통과를 염두에 두고 ‘맞춤형 지역전략산업’ 이라는 이름으로 올해 예산을 책정했고 그에 따라 사업을 진행

안철수 국민의당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시사점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쟁력 향상이라는 측면에서 규제프리존 특별법을 포함한 종합적인 대응 요구

출처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731715&code=11151100&sid1=s>

2. 새 정부 최우선 추진 정책은 '규제 완화'

01

개요

보도형식	언론	보도일자	2017.04.24
보도대상	전국	보도매체	서울경제

02

주요내용

"규제완화" 기업들은 새로 출범하는 정부가 최우선으로 추진해야 할 경제정책

- 기업들의 투자 확대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인프라를 서둘러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
 - 응답 기업 10 곳 중 8 곳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경기 부양에 나서야 한다고 답
 - 새 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전체 응답 기업의 28.4%가 규제 완화
- 새로운 대통령과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규제 대못'을 뽑겠다고 공언했지만 아직도 기업들이 체감할 만큼 규제 개혁이 이뤄지지 못했다는 인식이 팽배한 것으로 분석
 - 이어 신산업 정책 수립 (24.2%), 법인세 조정 등 기업 친화적 세제개편 (10.5%) 등의 순
- 기업들의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한 정책 및 제도 개선 과제
 - 4차 산업혁명 인프라 구축 (34.1%)이 가장 많았고 네거티브 방식에서의 규제 완화 (25.9%)와 규제 프리존 시행 (12.9%)
 - 기업들이 투자를 늘리기 위한 핵심 열쇠도 규제 완화
 - 이 밖에 지식재산권으로 창출한 수입에 대한 법인세 감면 (5.9%), 경제 무게추를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이동 (3.5%), 서비스산업 세액 감면 (1.2%) 등
-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전체 응답 기업의 80%가 동의
 - 최근 한국은행이 올해 경제성장률을 상향 조정하는 등 분위기가 좋아지고 있다고 하지만 반도체 등 일부 품목을 생산하는 기업에 국한됐고 연말 탄핵 정국 등으로 얼어붙은 소비심리를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전체 경기 부양이 필요한 상황

시사점

과거 정부는 규제완화라는 명목하에 수도권 규제를 완화해 왔음을 상기하고, 차기 정부에서의 규제완화 추진시 이에 대한 선제적 대응 방안 모색 필요

출처

<http://www.sedaily.com/NewsView/1OERT7KOE0>

3. 규제프리존과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이란성 쌍둥이?

01

개요

보도형식	언론	보도일자	2017.04.24
보도대상	전국	보도매체	한겨레

02

주요내용

다시 대선 이슈 떠오른 '규제프리존법'

- 안철수 후보 “통과를” 발언에 논쟁, 문재인 후보쪽 ‘대기업 특혜’ 반대, 박근혜 때 ‘창조경제혁신센터’ 대기업과, ‘규제프리존’ 지역산업 상당수 일치, 시민단체 “정경유착 재현 우려”
- **국민의당**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4 차 산업혁명을 위한 기업 투자를 촉진할 수 있음
 - 신현호 국민의당 정책실장은 “규제프리존법의 취지는 비수도권 지역이 기업 투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특정 지역마다 제한적으로 규제가 완화되기 때문에 의료 공공성 훼손이 우려될 수 있는 부분을 삭제하면 부작용이 크지 않을 것
- **더불어민주당**
 - 일부 대기업만을 위한 무분별한 규제완화 조처라며 비판 공세
 - 문재인 후보의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현재 규제프리존법안은 재벌 대기업이 형식적으로 지사체를 거쳐 일방적 규제완화를 추진할 수 있게 설계돼 있는데, 규제 완화의 특혜가 다양한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이 아닌 일부 대기업에 집중될 수밖에 없다”고 비판
 - “박근혜 정부 아래서 정경유착의 핵심 창구로 이용됐다고 비판받던 창조경제혁신센터와 규제프리존이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고 비판
 - 자동차 관련 전략산업은 4 개 지역 (대구 · 광주 · 울산 · 제주), 사물인터넷 기반 산업은 3 개 지역 (대구 · 부산 · 세종) 에 중복돼 선정되는 등 지역전략산업이 지역 환경과 산업간 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체계적으로 선정된 것이 아니라 대기업과 지사체간 나눠먹기 식으로 선정됐다는 것
- 앞서 2015 년 12 월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는 27 개 지역전략사업을 선정해 발표한 바 있고, 규제프리존법은 여기에 맞춰서 규제 특례 내용을 담음
- 공교롭게도 선정된 지역전략산업을 보면 해당 지역 창조경제혁신센터를 담당하는 대기업들이 핵심적으로 밀고 있는 전략산업들이 대거 포함
 - 이 센터는 2014 년부터 대기업이 17 개 시 · 도 중 한 곳을 맡아 창업기업 육성, 특화산업 투자 등에 지원하도록 한 기관
 - 삼성이 창조경제혁신센터를 맡고 있는 지역에서는 각각 자율주행차 · 사물인터넷 (IoT) 기반 웰니스산업 (대구) 과 스마트기기 (경북) 등, 현대차그룹이 맡고 있는 광주에서는 친환경자동차 · 에너지신산업, 엘지 (LG) 생활건강 공장이 있는 충북에서는 바이오의약과 화장품이 전략산업으로 선정
- 규제프리존법안 93 조는 전략산업육성계획의 수립, 규제프리존의 운영, 신규 규제 특례 제안 등 규제프리존을 포괄적으로 관리하는 지역추진단을 구성 ·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면서, 지역추진단의 운영에 ‘과학기술기본법 16 조의 4 제 3 항에 따른 전담기관’ 을 참여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이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은 전담기관을 ‘창조경제혁신센터’ 로 정하여 이 법안은 대기업이 하나씩 맡고 있는 창조경제혁신센터를 꼭 집어서 규제프리존 지역 추진단의 운영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규정

시사점

중앙정부의 지역정책에 대하여 지방정부 및 지역경제 차원에서의 검토와 평가를 통한 개선방안 모색 필요

참치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792042.html#csidx-246f62c36d5546985c3a9a64a8605cb

4. 대선주자들 "4 차 산업혁명 시대 , 신산업 규제 철폐 " 한목소리

01

개요

보도형식	언론	보도일자	2017.04.27
보도대상	전국	보도매체	디지털 타임스

02

주요내용

대선 주자들은 하나같이 4 차 산업혁명 시대의 신산업이 갖는 중요성을 강조하며 관련 규제 철폐 필요성을 주장

더불어민중당

- 혁신적 신기술이 기존 산업과 융합하면서 새로운 서비스와 산업을 만들 수 있도록 신산업에 관련해서는 네거티브 규제를 도입해 산업의 혁신을 최대한 지원

국민의당

- 4 차 산업혁명 시대에 주목할 신산업 중 하나인 핀테크를 언급하며 " 비합리적 규제를 최소화하고 규제의 불확실성 제거할 필요

바른정당

- 혁신안전망 구축, 네거티브 규제방식 전환, 벤처 투자 활성화 조치 등을 통해 실질적인 창업생태계를 구축

자유한국당

- 정부는 신산업육성을 위해 ' 규제 프리존 ' 도입 등과 같이 법적 , 제도적 기반을 만들어야한다" 며 " 국회 내 꾸러미 규제를 다룰 ' 통합규제조정위원회 ' 를 두도록 협조를 얻고 청와대와 정부 내에 규제전담부서를 뒤 신산업육성을 위한 삼각 협조체제를 구축

정의당

- 불필요한 규제 개선뿐 아니라 필요한 규제 신설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견해
- 이러한 가운데 콘텐츠 업계에는 기존 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규제부터 철폐해야 한다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으며 특히 국경 없는 경쟁이 심화하는 환경에서 우리 기업에 대한 역차별을 초래하는 규제부터 뿌리 뽑으라는 주문

• 콘텐츠 수출 주역인 게임업계의 경우

- 신기술 향연 속 지속성장 이끌 진흥책과 함께 , 섯다운제 (0~6 시 만 16 세 미만 청소년의 온라인게임 접속 강제 차단) , 결제한도 (성인등급 월 50 만원) 규제 등 성장의 발목을 잡는 규제를 완벽히 제거할 수 있는 정부를 갈망

• 외산 기업의 경우

- 국내 기업과의 형평성 (조세 형평성 등) 에 맞게 규제 집행력을 행사할 수 있는 법 · 제도적 정비가 요구
- 특히 토종기업 역차별 조장하는 규제 신설을 지양하라는 게 업계 당부

시사점

지역의 산업구조 개편을 위한 기반마련 차원에서 규제 철폐가 필요하며 , 이는 전통산업 등 기존 산업에 대한 비중이 높은 지역의 경우 기존 산업에 대한 규제 완화가 우선 필요

출처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7042802100431102001

1. 인천 강화 · 옹진군 등 휴전선 접경지역 자자체 " 수도권 규제 완화 해달라 " 잇단 요구

01

개요

보도형식	언론	보도일자	2017.04.16
보도대상	전국	보도매체	서울경제

02

주요내용

인천시 강화군 · 옹진군을 비롯해 경기도 연천군 등 접경지역 지방자치단체들의 수도권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 16 일 정부에 따르면 수도권 규제 완화에 가장 적극적인 곳 인천
 - 인천시는 관내의 강화군과 옹진군이 수도권 과밀화 방지를 목적으로 한 ‘수도권정비계획법’ 에 따라 개발정책에서 소외되고 있다고 주장
 - 특히 수도권 기업 지방 이전, 개발부담금, 양도소득세, 지방세 감면 등의 지원이 아예 없거나 미미하고 산업단지 · 공업용지 · 관광단지 조성, 연수 시설 · 대학 유치 등의 절차가 지역 실정에 맞지 않다고 강조
- 인천시의 설명에 따르면 강화군과 옹진군은 그렇지 않아도 국가안보 최일선에 위치한 접경지역으로 군사시설보호법 등 각종 규제로 묶여 있음 (수도권정비계획법과 함께 이중규제)
 - 휴전선과 마주한 ‘접경지역’ 은 인천 강화군 · 옹진군, 경기도 파주시 · 김포시 · 연천군 등
- 이에 따라 인천시는 ‘수도권 정비계획법’ 에서 현행 수도권 지역 범위와 관련 ‘인천시와 경기도’ 로 명시된 포괄적 문구에 ‘접경 지역은 제외한다’ 는 내용을 추가한다는 목표
- 경기도 연천군도 공공택지 조성사업인 옥산지구 개발사업, 전곡읍 일대 세계 캠핑존 조성사업, 임진강유원지 조성사업 등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각종 규제로 묶여 대부분의 사업들이 차질
- 다만 김포시와 파주시는 서울에 가깝다는 이유로 규제 완화에는 다소 소극적인 입장

강화 · 옹진군과 비수도권 세계비교

구분	강화·옹진	비수도권
기업재정지원	없음	재정지원 60 억원
지방이전 시 법인세	감면 없음	5 년간 100%, 3 년간 50% 감면
개발부담금	부과	중소기업 50% 감면
양도소득세	감면 없음	일반주택 양도 시 비과세
지방세	산업단지 등 35% 감면	산업단지 등 60% 감면

- 정부는 수도권을 제외한 나머지 14 개 시 · 도에 특화된 정책과 관련해 규제를 완화하는 ‘규제프리존법’ 도입을 추진 중
- 이와 함께 경기북부 지역을 수도권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함께 모색 중이다. 이 경우 가평군 · 양평군 · 동두천시 등 경기북부 낙후 지역도 재도약할 수 있는 기회

시사점

접경지역 등 수도권 규제완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비수도권의 경쟁력 약화와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측면에서 포괄적 논의 필요

출처

<http://www.sedaily.com/NewsView/10E05B64CH>

2. 홍준표 " 집권하면 수도권 규제 대폭 완화 "

01

개요

보도형식	언론	보도일자	2017.04.21
보도대상	전국	보도매체	중앙일보

02

주요내용

|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선후보가 경기도를 찾아 수도권 규제 완화를 약속

- **대통령이 된다면 수도권 규제를 대폭 완화, 수도권을 일방적으로 억제해 지방을 발전시킨다는 현재의 방법은 잘못**
 - 이날 평택 통복시장을 찾은 홍 후보는 "이제는 수도권을 억지로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마다 특성에 맞는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 **경북과 전남 등의 도지사들을 만났을 때**
 - '수도권을 규제해도 우리 지역에 기업들이 안오더라. 많이 내려와야 대전이고, 오히려 해외로 나가는 기업도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 면서 "수도권 규제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우리 지방 발전 계획은 별도로 특성을 살려 세워야 한다" 고 강조
 - 수도권은 수도권대로 경쟁력을 확보해 주고, 지방은 지방대로 특성에 맞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해 주는 정책이 올바른 정책
 - 이제는 수도권 규제에 묶여서 청년들이 또는 기업들이 투자를 꺼려해 청년들의 일자리를 막지 말고 이제 적절하게 조절할 때

관련기사

홍준표 " 대통령 되면 수도권 규제 대폭 풀겠다 ", 2017.04.30, NEWSIS

- 경기 동두천 큰시장사거리에서 이같이 말하며 " 정부가 지방에 있는 사람들 눈치 보고 공장이 충남까지 가는데 그렇게 해서 국토균형 발전을 하는 건 아니라고 본다 " 고 강조
- 수도권에 공장과 기업이 집중되는 이유는 물류비용이라며 수출을 하려고 하니 특히 첨단제품은 인천공항을 통해서 하니까 수도권에 몰릴 수밖에 없음
- 김해공항은 3.8 km 이상 활주로를 만들고 거기 항공화물로 수출할 수 있게 하여 남쪽을 발전하고, 수도권 규제를 묶어선 안 된다고 주장
- " 규제를 풀어서 우리 접경지역,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하려고 했던 DMZ 평화공원을 내가 해보겠다 "

시사점

수도권 규제완화 움직임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모니터링 필요

출처

<http://news.joins.com/article/21498474>

1. 2007 년 이후 신설 공공기관 혁신도시로

01

개요

보도형식	언론	보도일자	2017.04.20
보도대상	전국	보도매체	경남도민일보

02

주요내용

전국혁신도시협의회, 60 여 곳 단계적 이전 건의 " 지역 균형발전에 활력 " 대신공약 반영될지 관심

- 19 일 전국혁신도시협의회장인 이창희 진주시장 이름으로 각 정당과 국토교통부에 발송한 건의문
- 2007 년 7 월 이후 신설돼 현재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을 국가균형발전 취지에 걸맞게 지방 혁신도시로 추가 이전

수도권 소재 신설 공공기관, 혁신도시로 2 차 이전 추진 건의문 주요 내용

- 국가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2007 년에 제정된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10 개의 혁신도시가 전국에 조성되고 수도권 공공기관 115 개 기관이 지방으로 이전을 마무리
- 이로 말미암아 지역 인구유입, 고용인력 확대와 지방세수 증대 등 여러 분야에서 활력과 지역발전을 견인하는 큰 원동력으로 자리 잡아 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전 공공기관과 상생협력사업 추진 등으로 지역 경쟁력 향상에 이바지
- 그러나 혁신도시 출범이 상당기간 지났음에도 공공기관 종사자의 동반이주 (전국 평균 30.6%), 지역인재 채용 (전국평균 13.2%), 연관기업의 동반 이전 미흡 등으로 애초 기대했던 성과에는 이르지 못하는 실정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 18 조에서도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단계적으로 지방에 이전하는 시책을 추진하도록 명시되어 있는 바 기존 혁신도시에 추가적인 활력을 불어일으키고 지역균형 발전을 더욱더 촉진하기 위한 방안으로 전국혁신도시 (지구) 협의회 의견을 모아 2 차 이전을 건의
- 추가 이전대상 신규 공공기관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을 포함한 60 여 곳
- 대부분 임차건물에 상주하고 있어 지방 이전 추진 시 건물 매각 등 걸림돌이 없어 2007 년보다 정책 결정이 쉬울 것으로 예상

시사점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추진된 혁신도시 정책이 현재 기준으로 지역에 긍정적인 효과를 보이고 있어 혁신도시 2 단계 정책에 대한 지역차원의 종합적인 대응 방안 마련 필요

출처

<http://www.idomin.com/?mod=news&act=articleView&idxno=535950>

2. 혁신도시에 대한 대선 후보들의 정책

01

개요

보도형식	언론	보도일자	2017.04.25
보도대상	전국	보도매체	한겨레

02

주요내용

지역균형발전의 2 대 축은 세종시 건설과 함께 공공기관 이전을 통한 혁신도시 건설

- 세종시에 62 개 공공기관, 혁신도시에 115 개 공공기관이 이미 옮겨거나 이전 중이다. 세종시와 혁신도시 외에도 19 개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했거나 이전 예정
 - 이 두 가지 정책에 따라 해방 뒤 처음으로 수도권 인구가 지방으로 순이동하기 시작
 - 규모는 2013 년 4384 명, 2014 년 2 만 1111 명, 2015 년 3 만 2364 명, 2016 년 863 명
 - 정부와 소속·산하 기관의 이전에 따른 효과가 나타난 것

더불어민당

- 혁신도시를 4 차 산업혁명의 전진 기지이자 스마트시티로 만드는 ‘혁신도시 2 기’ 사업을 통해 균형발전을 추구
- 기존의 계획대로 혁신도시를 ‘클러스터’ (복합산업단지) 로 만들어 지역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 또 획기적인 지원을 통해 대기업 본사의 지방 이전을 촉진

국민의당

- 혁신도시의 클러스터 용지에 기업 이전을 촉진하되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시티로 발전시켜 지역 경제의 거점으로 활성화
- 구체적으로는 공공기관 관련 민간 기업의 입주 기준을 완화하고 입주 기업을 지원하며, 공공기관 신규 채용 때 지역 인재 비율을 35% 이상으로 함

자유한국당

- 혁신도시의 공공기관은 지역인재를 30% 이상 의무 고용
- 혁신도시에 교통·물류 등 미래형 도시 기반시설을 구축
- 또 혁신도시 주택의 착공과 분양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약속

바른정당

- 혁신도시의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각 지역별로 특화된 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여건 조성
- 또 지방 대학에 집중 투자해 창업과 중소기업의 혁신을 이루고, 기업을 유치해 일자리 창출과 소득 증대, 지역 경제 활성화 구조를 구축

정의당

- 재생 에너지를 비롯한 미래 산업을 지역별로 특화하도록 지원하고, 이것을 혁신도시와 연계
- 대선 후보 5 명은 혁신도시를 활용해 지역 발전의 거점으로 삼겠다는 데는 대부분 동의
 - 대기업 본사 이전이나 기업 유치, 클러스터 조성, 스마트시티 조성 등을 실제로 어떻게 할지는 분명치 않으며, 이런 약속은 기존에도 나왔으나, 대부분 실행되지 않았음
 - 정부가 공공기관 외에 민간 기업이나 대학, 연구기관 등을 유치하는 것은 말처럼 간단한 일이 아니기 때문

시사점

혁신도시를 활용한 지역 산업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한 적극적 대응 필요

참치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792253.html#csidxeebf4bcf-ba0c3258fde57562ce5a6c5>

3. 수도권규제 완화 정책 반대를

01

개요

보도형식	언론	보도일자	2017.04.26
보도대상	전국	보도매체	중도일보

02

주요내용

수도권 - 비수도권 격차 갈수록 심해져 반대 정책 추진으로 양극화 해소

-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격차가 심해지는 상황에서 수도권 규제완화가 이뤄진다면 내수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경제 앞날에 먹구름이 드리울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
-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는 통계에서 나타남
 - 26 일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수도권 총 사업체 수는 2002 년 45.6% 에서 2012 년 47.4% 로 늘어남
 - 경제활동인구도 같은 기간 47.3% 에서 50.5% 로 늘어나면서 수도권이 비수도권을 추월하는 등 격차가 심화
- 이런 상황에서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이 추진된다면 가뜩이나 수도권에 비해 비교열위에 있는 비수도권은 신규 투자유치에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지역 경제계는 우려
- 또 기업들이 수도권으로 유턴할 가능성도 커 지역 경제는 피폐해 질 것
- 국토 12% 에 불과한 면적에 국내인구 절반이 사는 수도권 비대 현상은 각종 기업과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 환경과 교통문제 등 부작용을 일으킴
- 때문에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국토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수도권 규제완화가 이뤄져선 안 된다는 게 지역경제계의 바람
- 이에 구체적인 대선 공약으로 지역 투자활성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임
- 비수도권으로 기업이 이전하거나 지방기업들이 지역에 잔류할 수 있도록 투자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는 게 골자
- 이와 함께 지역 근로자 정주 여건 개선과 민간투자 사회간접자본 (SOC) 확대 등 지역 산업환경과 기업 입지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실질적 지원정책을 마련
- 대선 때마다 수도권 규제완화를 둘러싼 공약 채택이 논란을 불러왔지만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이해관계 차이로 통일된 목소리를 내기 어려워 해결방안이 필요한 상황

시사점

국토의 균형적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수도권 규제의 활용과 함께 지역의 산업환경 및 입지 여건 개선이 동시에 추진되어야 실질적인 효과 기대 가능

출처

http://www.joongdo.co.kr/jsp/article/article_view.jsp?pq=201704273021